남북협력기금 이용 장벽 낮춰야

요즘의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은 그야말로 전성기에 접어들고 있는 듯하다. 지난 7월 이후 중단된 남북한 대화나 북한 핵문제, 기타 여러 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 분야에서만큼은 남과 북이 협력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경제협력 업체들은 예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및 기타 굵직한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큰 기대를 갖게 한다.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경제협력 사업에 임하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는 북한의 입장이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최근 북한은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여러 인사에게 ▶경협 10여년 동안 제대로 된 공장 하나 건설하지 못하고▶위탁가공 사업도 북측에는 별 이득을 주지 못했으며▶교역 역시 미수금 때문에 좋지 않은 모습만 인민들에게 남기고 있다면서 보다 실질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선정, 북측 경제 재건에 적합한 성공 모델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미 북한은 경제협력 분야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최근에는 대남 경제협력 전담 창구였던 민족경제협력련합회를 민족경제협력위원회로 한 단계 격상시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개혁에 앞장서며 적극적인 경제협력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일련의 변화를 남측의 경제협력 사업자들은 호재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남측의 상황을 보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민간 중소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의 주요 정책과 정세에 민감하게 작용하다 보니 그 외형만 커지고 내실은 없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자리매김하는 듯해 매우 안타깝다. 민간 기업들이야말로 정부 주도의 교류협력 정책에 입각해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시키고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의 발전을 도모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현실적인 지원정책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어서 이와 같은 북한의 적극적인 협력의지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제도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자 가운데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분류해 우대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향후 입주할 개성공단 및 기타 업체도 중소기업 일색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 잣대는 많은 경제협력 중소기업을 도산 위기로 내몰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대출 제도로는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 현재의 남북협력기금 사용 내역을 보면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대출이나 사회문화교류 분야 등 경제협력 분야에 비해 비생산적인 부분에 치중되고 있다. 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대출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을 우선과제로 삼으며 적극 지원하고 장려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시각에서는 금강산 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을 그 전부로 여기는 듯하다. 수많은 민간경제협력 업체가 정

전문성이 확보돼야 할 통일부나 관계부처 담당자들은 잦은 인사이동과 행정편의주의적 사고,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질적인 대북창구의 역할은커녕 오히려 수많은 경제협력 업체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사이에, 중국은 북한의 주요 경제협력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금 중국의 많은 기업이 북한으로 몰려가고 있으며, 중국 정부에서는 북한 투자 업체에 우대정책을 제공하며 대(對) 북한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이는 우리 정부가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안일한 자세로 일관한 결과다. 경의선 복원공사를 진행하며 꿈의 실크로드, 동북아 핵심 국가 건설을 외치며 환호하던 때가 엊그제다. 그러나 자칫하면 북한의 기간산업과 천연자원 개발사업까지 중국과 같은 제3국에 내주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제 정부는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의 현주소를 직시해야 한다. 잘못된 관행과 불필요한 절차.제도를 개선하고,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의 틀을 새로 짜야 할 것이다. 정부가 표방하는 평화번영정책에 적합한 상호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적극 장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선 경제협력 사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현실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해 이제라도 진정한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번영 정책의 결실을 보는 유일한 길이다. / 김한신 (G-한신 대표)

<출처 : 중앙일보 내 생각은 2004. 9. 17>